

민실위 보고서

2012년 8월 14일(화)



황용구 신임 보도국장의 정책설명회가 어제(13일) 밤 열렸다. 황 신임 국장은 MBC뉴스를 공정하고, 따뜻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편성 환경을 개선하고, 제작 인프라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기자들의 평가 방식도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황 국장이 과연 이런 포부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명색이 보도국의 수장이 '기자들이 어떻게 보도국 밖으로 나갔는지 모르고, 그 기자들을 어떻게 데려올지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무소신에 무능력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김재철과 권재홍의 명령만 충실히 수행하는 '실권 없는 보도국장'의 모습만 확인시켜준 씁쓸한 정책설명회였다.

노동조합 민주방송실천위원회는 주요 쟁점에 대한 황용구 국장 발언의 요지를 정리해 실는다.

실권없는 국장의 알맹이 없는 정책설명회

1. 타 부문 전출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한 것인가? 본부장인가? 국장인가?

A. 인사에 관해서 누가 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회사에서 정한 것이다.

Q. 회사라 하더라도 정한 주체가 있을 것 아닌가?

A. 본부장이든 국장이든 회사라는 법인이 정하는 것이지, 자연인이 정한 것은 아니다. 내가 정한다고 정해지고, 본부장이 정한다고 정해지는 것인가? 나는 피 인사권자로 여러분과 함께 왔다. 인사 당시에 내가 논설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인사를 논설실장하면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연인 누구라고 특정지어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말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Q. 타 부문 전출자들의 복귀 방안은 무엇인가?

A. 내가 타 부문에 가있는 후배들의 면면을 알고, 빨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내가 더 이상 인사에 관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 것이다. 나의 의지는 분명 나가있는 또 다른 여러 인재들, 함께 일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Q. 타 부문으로 전출 간 기자들은 왜 챙기지 않는 것인가?

A. 보도국 밖에 있는 후배들은 보도국장의 영역이 아니다. 제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서적으로는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국장이 인사부, 타 본부 소속으로 배치돼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도국장이 거기까지 가서 책임지는 건 권한 밖이라고 생각한다.

2. 허리우드 액션 논란에 휩싸인 권재홍 본부장에게 <뉴스데스크> 앵커 직 사퇴를 건의할 생각은?

A. 지금 그 논란이 일반 시청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논란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뉴스앵커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 엄연히 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게 불합리한 결과를 최소화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그것 외에 무엇이 가능하겠는가?

Q. 우리 뉴스는 매일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시급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뉴스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 우려된다. 법절차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회사와 조합이 공동여론조사를 해서, 일반인들이 이 사건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권 본부장이 앵커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맞는지 알아보면 어떨까?

A. 그 부분은 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회사와 협의해야 할 문제이다.

3. 황용구 국장이 편집회의에서 카메라 기자를 지칭해 '양아치' 라는 발언을 했다. 시용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카메라 기자가 한 시용기자를 고의로 취재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귀사 했다' 는 말을 듣고 황 국장이 한 발언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카메라 기자들의 자체 조사결과, 그런 사실은 없었다. 국장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경력기자의 진술에 담긴 정황이 대단히 구체적이었다. 그래서 좀 격한 표현을 썼다. 하지만 해당 경력 기자가 더 이상의 진상 조사를 원치 않아 조사를 중지시켰다.

Q. 정확한 진상 조사를 원한다. 만약 카메라 기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정말 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카메라 기자를 '양아치'로 매도했다면 국장이 사과해야 한다.

A. 진상 조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약자인 경력기자가 누구인지 특정된다. 나중이라도 경력기자 본인이 진상조사에 동의하면 하겠다. 하지만 그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조사하지 않겠다. 격한 말을 한 데 대해서 카메라 기자들에게 사과한다.

4. 경복궁 옆 대형화재 당시 촬영화면이 정오 뉴스에 제대로 나가지 않은 것에서도 보듯, 조직 개편으로 영상취재와 영상편집 과정이 나뉘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편집3부를 이전처럼 영상편집부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데 대한 의견은?

A. 내가 두 조직을 다시 합병시키겠다는 식의 말 못한다. 그런 위치가 아니다. 보도국의 엄정한 조직을 국장이 뺏아 붙였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충분히 고려 후 조치를 취하겠다.

5. 양승은 아나운서의 모자 논란에 대한 입장은?

A. 처음에 2~3일 쓰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쓰지 말라고 통보를 했다. 하지만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현지에서 계속해서 쓰고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대로 경위를 묻겠다. 처벌을 검토하겠다.

6. 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는 뉴스를 스포츠 관련 소식으로 가득 채우면서도, 정작 평상시엔 스포츠 뉴스를 확대하고 있다. 스포츠뉴스 부활 방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A. 스포츠 뉴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시청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기자들의 원활한 취재를 돕는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보도국의 다른 구성원들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스포츠 뉴스를 블록화해서 일정정도 보장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MB 띄워주기에 충실했던 독도 방문 보도

‘역대 대통령 최초’ 방문의 배경과 파장 생략된 부실 보도



‘헌정 사상 첫 독도 방문’, ‘독도는 우리 땅, 단호한 경고’, ‘독도방문 3년 전부터 준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전달하는 MBC 뉴스의 제목이다. 잇따르는 측근 비리와 4대강 녹조 현상 등으로 임기 중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면돌파용 무리수를 뒀다는 일각의 분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청와대는 독도방문을 3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밝혔지만 취임 이후 줄곧 이명박 정부의 대일 외교는 전격적인 독도 방문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7월, 일본 총리가 자국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하자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이 같은 사실은 위키리크스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한 달 쯤 전에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발각돼 국회에서 저지당하기도 했다. 이같이 너그려왔던 대일 외교 기조가 갑자기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임기 말 지지율 제고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역대 대통령들은 그동안 왜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 같은 의문을 MBC의 보도를 통해서도 해소할 수 없었다.

독도를 둘러싼 갑작스런 외교기조의 변화가 초래할 한일 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임기 6개월 남은 지지율 10% 대의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은 어떤 것인지, MBC 뉴스에서는 분석할 능력도,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레임덕에 빠진 이 대통령이 반일 감정에 호소해 구심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반면 KBS는 심층취재 리포트를 통해 잇따라 불거지는 측근 비리와 날로 거세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등 국내 정치 상황이 고려된 결정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회의장단과의 오찬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다”고 평가하고 독도방문도 3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라고 말해 독도방문의 효과에 상당히 만족했음을 시사했다. 뉴스데스크는 이 같은 청와대의 분위기를 충실히 전달하는데 머물렀다. 이날 MBC 라디오 ‘2시의 취재현장’ 앵커는 클로징을 통해 갑작스런 독도방문이 초래할 외교적, 군사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일본에게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를 두둔했다.

김재철 부임 이후 MBC 뉴스는 이명박 대통령 띄우고, 비리는 감싸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셈이다. MBC 뉴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국익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정치적 이익인가?